

## 환경평가대행 공사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공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를 추진할 때 평가대행계약과 공사계약을 반드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4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평가대행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평가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평가대행계약과 공사계약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분리발주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평가대행 비용을 공사비용에 포함시키는 등 현실적으로 책정하지 않아 부실평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발주 의무화로 평가대행 비용이 상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면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업체가 미리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주자만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 아래 시공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사전공사 방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활·사회경제 등 3개 분야 23개 항목 중 문제의소지가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중요한 항목은 심도있게 조사하는 스코핑제도(중점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환경신기술 설계편람 발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3월 13일 환경신기술의 현장보급을 촉진하

기 위해 기술의 특징과 적용범위, 처리성능 등을 수록한 "환경신기술 설계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에는 수질 36건·대기 6건·폐기물 9건 등 환경부가 환경신기술로 지정한 총 50여건의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 적용된 17건의 사례도 실려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설계편람을 지방자치단체와 설계, 건설회사, 환경산업체,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환경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emc.or.kr)나 환경신기술 웹사이트(www.koetv.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신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환경시설 운영자 등 일선 기술 사용자들의 이해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98년 환경신기술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질, 대기,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총 58개 기술이 인증 받았으며, 이 가운데 46건의 신기술이 431개 현장에 적용됐다.

## 수자원공사, 반월·시화공단에 300억원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안덕사업단은 지난 3월 13일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모두 300억원을 업체에 무이자 대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공은 반월·시화공단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 악취 배출업체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악취배출업체 40곳을 선정, 모두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한도제한 없이 2년 거치 10년 무이자 상환조건이다.

수공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100개 업체를 선정, 같은 조건으로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산자부, 환경경영 SCM사업 추진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해 공급망관리(SCM) 체제를 활용한 환경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산자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공급기업(협력업체)과 함께 청정생산과 환경경영도입 프로그램을 제시할 경우, 사업비 가운데 50~75%를 지원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이 10개 이상의 협력업체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로 하고 환경경영컨설팅 및 기술보급 비용 등으로 연간 5억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5월중 사업계획서를 받아 6월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 PVC포장재 내년부터 사용 금지

샌드위치나 김밥 등을 담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를 내년부터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PVC 재질의 포장재에는 납과 아연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스프탈레이트(DEHP), 왁스가 함유돼 있어 제조과정이나 매립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독성첨가물이 유출되는 등 환경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10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폐기물 규칙을 개정해 "기존 PVC 재질로 코팅된 포장재의 사용규제 외에도 달걀이나 메추리알, 튀김이나 김밥,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을 담은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PVC 연간 사용량은 90만

므로 대부분 전선이나 장관, 기계부품 등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2.7% 가량인 2만4천여 정도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에 PVC 포장재가 혼합 배출될 경우 PE나 PP의 재활용도 극히 어려워진다”면서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전체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련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VC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완화대책 마련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모두 16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설비투자가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1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및 완화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투자시사를 밝힌 곳은 LG필립스로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모두 100억달러(12조원 상당)를 투입, 경기도 파주에 50만평 규모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공장입지 규제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문제 등으로 부처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이를 조기에 해결할 방침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동부전자에 대해 오는 4월 정기

국회 때 관련법을 개정,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동부전자는 전자제품 및 부품 관련 생산시설에 향후 5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유승용차 도입기준 등을 조기에 결정짓기로 하고 환경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하락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관련법규를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모두 16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설비투자가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11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 건물 증축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역의 건물 건축주는 기존 건물을 면적 기준 50% 이상 증축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건물 신축 때와 마찬가지로 증축 때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

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전에는 증축시 전체 면적이 1천600㎡를 넘을 때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면적이 300㎡에서 450㎡로 증축되는 등 면적이 5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때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중전에는 서면검사에 합격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독정화조와 마찬가지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시공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약식설계 도면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축산퇴비의 방치나 과다살포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는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퇴비, 액비의 생산, 처분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축산폐수 재활용업자도 하루 생산능력이 1t 미만일 때는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해도 무관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400kg 이상만 돼도 제조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400kg 이상 1t 미만인 기존 업자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 여수 영세제조업 환경개선비 보조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 지도원은 유해, 위험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원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1천만~2천만원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 9일 여수지도원에 따르면 50인 미만 제조업체들이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투자액 1천만원 이하는 100% 지원하고,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50% 한도에서 1천만원을 추가 지원

할 방침이다.

또 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5억원까지 연리 4%,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여수지도원 관계자는 “올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지역 100여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1억2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 아파트 일조권 피해 환경분쟁조정 대상된다

오는 7월부터 아파트와 철교 등 고층 건물이나 구조물에 의해 일조권 피해를 받으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의 요건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에고하고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건축법에 의해 일조방해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고층건물과 함께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량이나 철교 등의 구조물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일조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시 내의 아파트나 고층건물은 물론 고속철도 교량 등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배상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 전자제품 환경규제 대책 마련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7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응키 위해 3월말까지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외국 환경규제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 업계에 전파하고 납이 사용되지 않는 무연솔더(뿔납)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센터(테스트베드)를 수도권과 구미 지역에 설치키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납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물질을 개발중이거나 외산솔더를 수입해 제조공정을 개선중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무연솔더 제품의 생산이 곤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연솔더의 공정조건 연구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7일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응키 위해 3월말까지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외국 환경규제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 업계에 전파하고 납이 사용되지 않는 무연솔더(뿔납)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센터(테스트베드)를 수도권과 구미 지역에 서설치키로 했다.



를 위한 파인롯 라인을 구축하고 환경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인프라에 3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따로 수립키로 했다.

## 금강유역 142개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실태 점검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42개 대형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3월 6일 발

했다.

대상 사업장은 골프장이나 택지, 석산 개발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62곳과 도로 건설, 골재채취, 토석채취 등에 앞선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 40곳,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대상 40곳이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연중 정밀 점검을 받게 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농도가 정해진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연 2회 이상 시료채취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44개 사업장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다.

## 대구시, 대기개선실천계획 마련

대구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공기의 오염을 환경기준의 80%이하 수준까지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개선실천계획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8일 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환경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공회전 억제 조례제정, 천연가스 버스 보급, 운행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도입 및 환경친화적인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 경북권 대기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대형산업체의 청정연료 전환과 소각장 배출시설 관리 강화, 비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친화기업을 발굴 육성하

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며 친환경적인 도로포장재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 한국 수질 세계 8위...1위는 핀란드

한국은 깨끗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수질 항목에서 1.27을 기록, 1백22개국 중 최고점을 얻은 핀란드(1.85)와 캐나다(1.45), 뉴질랜드(1.53), 영국(1.42), 일본(1.32) 등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로 담수, 지하수의 질과 양, 하수 처리, 수질 보호 관련법 등을 종합 검토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수질과 관계없이 수자원의 양만 측정된 조사에서는 한국의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이 1천4백91m<sup>3</sup>로 1백82개국 중 1백46위를 기록했다.

물 부족 국가로는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이 1천76만7천m<sup>3</sup>인 그린란드에 이어 미국 알래스카주,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이 올랐으며, 쿠웨이트는 연간 1인당 가용 수자원이 10m<sup>3</sup>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20년 후 인류의 물 사용량은 지금의 3분의 2로 감소할 것이며, 50년 후에는 상황이 악화돼 48개국의 20억 인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전, 3.4산업단지 친환경 단지로 조성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3.4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3.4산업단지 와 인근지역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3.4산업단지 악취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악취배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악취 특성, 악취 확산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분석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환경관련 지역대학



인천시는 업체들로부터  
지용오염물질 저감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의  
홍덕터제를 활용해 기술진단을 해주고  
시설개선도 도와주기로 했다.  
시는 또 물 상반기중 공단내 2개 지점을  
선정, 오염배출 상태를 정밀측정한 후  
하반기부터 공단내 오염배출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오염측정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및 연구기관의 환경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지역환경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장 강호 충남대교수)에서 주관하게 된다.

특히 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황화수소 등 8가지악취물질 외에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22가지 악취 물질까지 확대 조사해 민원유발 악취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을 “악취저감 장·단기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해 쾌적한 환경이 항상 유지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야, 환경규제 대폭정비 추진

한나라당은 환경과 관련된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규제 일원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당 고위 정책관계자는 지난 3월 5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중복 및 불합리한 규제가 적지 않아 투자에 장애가 된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각로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배출부담금, 예치금 등 부과된 환경세만큼 법인세 등을 인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문제는 규제 위주보다는 생산공정 진단,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지원 강화 방향으로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환경관련 기술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세계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특히 기술개발 실패 시에도 투자비를 일부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 남동공단 환경오염 개선 인천시, 대책안 마련 착수

인천시는 올해부터 남동공단 일대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환경부에서 시로 넘어옴에 따라 공단지역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올해부터 3년간 남동공단 일대의 오염물질 배출을

30% 줄인다는 목표아래 입주업체들의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업체들로부터 자율오염물질 저감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인천환경기술 개발센터의 홈닥터제를 활용해 기술진단을 해주고 시설개선도 도와주기로 했다.

시는 또 올 상반기중 공단내 2개 지점을 선정, 오염배출 상태를 정밀측정한 후 하반기부터 공단내 오염배출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오염측정망을 운영키로 했다.

## 진주시 물이용부담금 면제될듯

도시 절반에만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돼 논란이 돼왔던 경남 진주시의 물이용 부담금 문제가 오는 6월께 해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오는 6월 진주시 절반에만 부과되던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댐 만수위를 기준으로 해 주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제외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강댐이 시내에 위치한 진주시의 경우 물이용 부담금 면제지역과 부과지역이 도심 한 가운데서 양분돼 전체 10만9천여 가구 중 절반인 5만여 가구에만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왔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목적 댐이 소재한 시·군의 50% 이상이 댐 주변지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시·군 전체를 물이용 부담금 면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됨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진주시민들의 갈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댐 하류지역 주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17억원 가량의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신 2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가해자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01년의 18건에 비해 2002년은 3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책임회피성 시간 끌기 소송에 앞장섬으로써, 배상금 지불과 방음시설의 설치 등 방음대책의 지연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 폐수배출업소 자율환경협약제 시행

제주시가 3월부터 일반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 업소, 우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자율환경협약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폐수배출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시가 정한 환경개선목표를 이행키로 협약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환경협약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월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기준보다 30% 이상 강화한 자체의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타당한 환경개선목표이

행계획서를 제출한 폐수배출업소와 협약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자율환경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가지도점검 면제를 비롯해 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 폐수배출 방지시설 운영, 기술진단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환경협약 체결 대상업소는 일반 폐수배출업소 262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34개소, 우수처리시설 17개소 등이다.

##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연간 1천억원

환경신기술이 사업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신기술 지정제도는 환경관리공단이 우수기술을 환경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난 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질, 대기,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총 58개 기술이 인증받았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받은 58건의 신기술 가운데 26건(39%)이 사업현장에 적용됐으며, 지난 99년부터 제작년까지 3년간 총 3천269억원의 매출실적이 나타났다.

## 환경분쟁 시간끌기 소송으로 주민피해 기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가해자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01년의 18건에 비해 2002년은 3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책임회피성 시간 끌기 소송에 앞장섬으로써, 배상금 지불과 방음시설의 설치 등 방음대책의 지연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2000년의 60건 중 9건, 2001년의 121건 중 27건, 2002

년의 263건 중 40건 등 3년 동안 처리한 444건의 17%(76건)가 위원회의 배상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중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79%(60건)를 차지한 데 비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1%(16건)에 그쳐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4배정도 높은 소송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76건 중에서 2월 15일 현재 1심 법원이 판결 또는 조정한 25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피해자소송 11건의 판결(조정)액은 222,115,000원으로 위원회 결정액 161,187,560원의 138%를 차지하여 실익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소송 14건의 판결(조정)액은 1,019,655,000원으로 위원회 결정액 1,117,308,760원의 91%에 이르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과 처리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위원회가 25건의 재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개월이었지만, 1심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걸린 기간은 평균 12개월로서 처리기간도 소송이 조정보다 3배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질환경오염사범 3천 887명 적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겨울철 갈수기를 맞아 지난 1월 15일부터 한달간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3천399건에 3천887명을 적발해 이중 21명을 구속하고 3천8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월 20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폐수와 폐기물 등 수질 유해물질 배출·투기행위(구속 12명), 기타 하천유역 세차 등 직·간접 수질 환경오염행위(구속 8명),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변경이용행위(구속 1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이다.

단속사례를 보면 유통업체 업주 허모(42)씨는 지난 2001년말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공장에서 냉동육을 물에 녹이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루 평균 2천ℓ가량을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건축업자 김모(40)씨도 작년 말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신축공사장 건축폐기물 7만여t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5만여㎡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불법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겨울철 갈수기를 맞아 지난 1월 15일부터 한달간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3천399건에 3천887명을 적발해 이중 21명을 구속하고 3천8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월 20일 밝혔다.



## 안산시, 4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3월 14일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이달부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성곡동 16만4천㎡ 부지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17만9천t, 공장폐수 20만6천t 등 하루 38만5천t을 처리하며 부대시설로 중계펌프장 17개소, 차집관거 27.6km 등을 갖추고 있다.

## 울산지역 공해배출 46개 업소 적발

국가산업단지의 배출업소 관리권이 울산시로 위임된 후 총 46개 업소가 적발돼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시는 산업단지내 관리권 위임(2002.10.1)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외 환경오염물질 배출 702개 업소(대기 251, 수질 451)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46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개선명령 21개소, 조업정지 3개소, 사용금지 6개소, 경고 13개소, 기타 3개소 등이며, 7개소는 고발병행 조치됐다.

위반사항별 내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위반은 모두 20개소(대기 3개소, 수질 17개소)로 화학적산소요구량 5개소, 중금속 1개소, 계면활성제 4개소, 기타 10개소 등이다.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은 폐수무단방류 2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5개소 등 7개소,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은 도장, 화학, 금속제품 각 1개소 등 3개소가 적발됐다.

이 밖에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청정연료 사용위반 2개소,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개소, 비산먼지 관리위반 2개소, 기타 3개소 등이다. ◀